

## [ 종합·해설 ]

미국발 쇼크 국내 금융·실물경제 패닉

# 환율 급등·소비 위축…지역 中企 ‘비명’

미국발 금융불안의 충격이 연일 금융 시장을 강타하면서 국내 실물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제조업체들의 경우 환율급등에 따른 재산성 악화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8월 중 국내 생산과 소비 활동 역시 급속히 냉각되는 등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8월 들어 현재와 미래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각종 지표가 크게 악화된 가운데 경상수지 적자폭도 사상 최대치로 불어나는 등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율급등 여파, 광주·전남 기업 ‘희비’=환율불안으로 광주·전남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제품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기업들은 수익성이 개선된 반면,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생산비 급증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환율불안의 여파로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광주·전남의 중소기업 및 여행업종 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환율상승은 중소업체들의 생산비를 높이는 반면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냉장고 부품을 생산하는 광주 하남산단내 A업체 대표는 “필스滕 등 원자재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환율급등에 따라 매달 1천만원 가량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의 여행업계도 환율이 1천200원대를 넘어서자 맘연자실한 표정이다. 그동안 저가의 패키지 상품개발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지만 최근 환율급등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경기 급속 하강, 생산·내수 ‘곤두박질’= 지난달 30일 통계청에 따르면 8월 들어 국내 경기 상황과 함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지표가 지난 1981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월째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8월중 현재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달보다 0.2%포인트 하락해 7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또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 역시 전달보다 0.4%포인트 하락하면서 9개월째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8월 광공업생산은 지난해 8월보다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년 동월대비 광공업생산



경상수지 기획재정부장관과 백국환 2차관이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출석, 구제금융안 부결이라는 미국발 악재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국제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금융악재와 함께 환 혜지 상품인 ‘카코’(KIKO) 손실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총리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구제금융안 부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환율이 급속도로 오르는 것을 막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을 통해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환시장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고 보유액도 충분히 갖고 있는 만큼 유동성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다”고 시장 상황을 언급했다.

미 하원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안을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차관급 회의도 열어 금융시장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창용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관련법안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예상과 깨고 부결돼 미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구제금융 관련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오는 11월 4일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휴회를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절차를 감안할 경우 미 의회의 구제금융 관련법안 처리는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미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금융구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국제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금융악재와 함께 환 혜지 상품인 ‘카코’(KIKO) 손실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우선 달러 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한 스와프시장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달까지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는 개장과 함께 급락 중인 국내 증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식 공매도 금지, 일일 자사주 매입한도 10%로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다.

금융위는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생산비 치솟고 설비 투자 업두도 못내

## 내수·수출 동반 부진 가속…생산활동 급랭

증가율은 6월 6.8%로 떨어졌다가 7월 8.6%로 증가폭이 확대됐으나 9월 들어 다시 대폭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생산이 9.2%나 줄어든 가운데 컴퓨터와 식료품 생산도 각각 19.8%, 4.8% 감소했다.

◇내수부진 여파 생산활동 급랭, 수출둔화 불기피=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수출은 9월 둘째 주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현대차의 부분파업이 이달에도 이어지고 수출의 10.7%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도 적신호가 켜지면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수출 주력 지역으로 부상한 자원부곡으로의 수출도 문화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실제 지난달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배럴당

실제 전년 동월 대비 수출을 출하 증가율은 지난해 10월(19.2%)부터 올해 7월(12.6%)까지 10개월간 두 자릿수 증가율을 유지했지만 8월에는 6.7% 늘어나는데 그쳤다.

◇유가·환율불안 여파 경상수지도 ‘최악’=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8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경상수지는 47억1천만달러 적자로 기록했다. 이는 198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지식경제부는 경상수지 악화가 유가 변동과 선박 인도 시기 조정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국제유가 하락이 아직 원유도입 단가 인하로 연결되거나 상황에서, 경유 등 석유제품 수출단가만 크게 낮아져 상품수지가 나빠졌다.

이는 설명이다.



113달러로 한 달새 18달러나 하락했지만 원유 도입 단가는 130달러로 전월의 131달러와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국제 경유가격은 168달러에서 136달러로 급락했다.

통관상 지난달 수출된 신박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8월 경상수지에 반영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간 수출액이 8억2천만달러나 되는 점도 상품수지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이종태기자 jtlee@kwangju.co.kr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유동성 걱정할 단계 아니다

## 증시 안정화 주식 공매 금지

### ■ 정부, 미국발 시장 동요 차단 총력전

지난달 30일 구제금융안 부결이라는 미국발 대형악재가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관련 정부부처도 시장 조기안정을 위한 총력대응에 나섰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가 끝난 직후 총리 주재로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 경제관련 장관들이 참석하는 긴급 금융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구제금융안 부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과 대응책 등을 주로 논의했다.

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나서 환율이 급속도로 오르는 것을 막겠다”면서 “필요하다면 외환 현물시장에도 외환보유액을 통해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미 하원은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법안을 지난달 29일(현지시각)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긴급 차관급 회의도 열어 금융시장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이승일 한국은행 부총재와 이창용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7천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관련법안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하원에서 예상과 깨고 부결돼 미국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미 하원은 구제금융 관련법안을 처리할 때까지 오는 11월 4일 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휴회를 않기로 결정하고, 일단 2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수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절차를 감안할 경우 미 의회의 구제금융 관련법안 처리는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미하원은 전날 양당 지도부와 행정부가 금융구제안에 합의함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상정,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과반수 동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국제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금융악재와 함께 환 혜지 상품인 ‘카코’(KIKO) 손실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우선 달러 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한 스와프시장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달까지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시 안정화 주식 공매 금지

국제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금융악재와 함께 환 혜지 상품인 ‘카코’(KIKO) 손실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우선 달러 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한 스와프시장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달까지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시 안정화 주식 공매 금지

국제화위원회 부위원장, 김동수 기획재정부 1차관, 김동연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참석했으며 미국발 금융악재와 함께 환 혜지 상품인 ‘카코’(KIKO) 손실 대책 문제도 논의했다.

금융시장 조기 안정을 위한 대책도 쏟아졌다. 우선 달러 유동성 부족과 관련해 정부는 당초 예정대로 외국환 평형기금을 통한 스와프시장 개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예정대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이달까지 최소한 100억달러 이상의 외평기금을 활용해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아울러 글로벌 신용경색과 경기 침체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종합 지원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금융시장 위기의 잠재적인 전파 경로를 파악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기가 전파되는 것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 충격에 대해 선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증시 안정화 주식 공매 금지